



산업통상 특집
소속기관 협동연구

국회입법조사처 | 2026. 03. 30. | 제403호



NARS 현안분석

NARS CURRENT ISSUES AND ANALYSIS

산업-통상 넥서스 3대 축: 산업정책 안보화, 공급망 블록화, 시장접근 조건화

최정윤

2026년 주목해야 할 미국·중국·EU 3대 경제권의 산업-통상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 과제

- ❑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포착되는 변화의 핵심은 산업정책이 귀환하고, 통상 정책과 긴밀히 연결되면서 교역·투자·공급망의 작동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것임
- ❑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중국·EU의 3대 경제권은 WTO 다자 체제 규범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에 따라 규범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우회하는 이른바 '전략적 이탈'을 선택하고 있음
- ❑ 2026년 통상환경 변화를 '산업-통상 넥서스(nexus)'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3대 경제권의 주요 산업-통상 쟁점 검토를 통해 한국의 정책적·입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함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The Three Pillars of the Industry-Trade Nexus:

Securitization of Industrial Policy, Formation of Supply Chain Blocs,
and Conditionalization of Market Access



I

문제 인식: 2026년 통상환경 변화의 본질

“
최근 포착되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는 단순한 자유무역의 후퇴가 아닌, 산업정책이 통상 영역의 핵심 동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

“
오늘날 미·중·EU 3대 경제권의 산업정책 경쟁을 ‘시장 형성 경쟁 (market-shaping competition)’으로 규정할 수 있다.

”

2026년 글로벌 통상환경은 여러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고 서로 얽혀 증폭되는 ‘다중 위기’의 상황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나 지정학적 긴장의 일시적 현상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최근 포착되는 변화의 핵심은 주요 경제권에서 산업정책이 귀환하고, 통상정책과 긴밀히 연결되면서 교역·투자·공급망의 작동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자유무역의 후퇴라기보다, 산업정책이 통상 영역의 핵심 동력으로 등장하면서 나타난 산업-통상 간 관계 재설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¹⁾는 2026년 글로벌 교역의 핵심 트렌드로 ▲ 남남(South-South)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 ▲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리스크관리 중심 재편 ▲ 무역 규제의 상시화 및 국내 정책 우선주의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은 단발적, 개별적 현상을 넘어서는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결합이라는 구조적 전환을 시사한다.

기존 국제기구 데이터는 최근 산업정책의 질적 변화와 전략적 속성을 충분히 포착하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과 Global Trade Alert(GTA)가 구축한 신산업정책²⁾관측소(New Industrial Policy Observation, 이하 NIPO) 데이터는 이러한 한계를 실증적으로 보완한다. NIPO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2,500건이 넘는 신규 산업정책 조치가 확인되었고, 이 중 71%가 무역 왜곡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무역 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 수입 제한 조치(882건)는 글로벌 교역의 최소 22%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국·중국·EU가 전체 조치의 48%를 차지해 산업정책 경쟁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³⁾ Martin(2026)은 이러한 현상을 ‘시장 형성 경쟁(market-shaping competition)’으로 규정하면서, 오늘날 산업정책이 과거보다 훨씬 정교하고 고도화된 설계를 바탕으로 전략적 가치사슬과 병목 지점(chokepoint)을 중심으로 경쟁 조건과 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고 진단한다.⁴⁾

오늘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현상에 대한 관찰을 넘어, 산업정책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그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2026년 통상환경 변화를 ‘산업-통상 넥서스(nexus)’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미국·중국·EU 3대 경제권의 산업-통상 쟁점 검토를 통해 한국의 정책적·입법적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UNCTAD, 「Top trends redefining global trade in 2026」, 『Global trade update』, Jan. 2026.

2) IMF는 분석을 위해 국가적 경제 목표 또는 비경제적 목표(예: 안보·사회·환경) 달성을 위해 특정 국내 기업, 산업 또는 경제활동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표적 개입을 산업정책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신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ies)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전통적 대상(철강·알루미늄 또는 자동차 부문)이나 목표(예: 경쟁력 강화) 이외에도 새롭게 부상하고 확장되는 목표와 대상을 포괄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기술하였다(IMF, 「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y in Data」, 『Working Paper』, Jan. 2024. p.6).

3) IMF, 「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y in Data」, 『Working Paper』, Jan. 2024. p.7.

4) Martin, Fernando, 「Industrial Policy as Market-Shaping Competition: Evidence from China,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2009–2024)」, Global Trade Alert, Jan. 2026.

II

산업-통상 넥서스: 역사적 배경과 핵심 특징

가. 산업정책 재부상의 역사적 배경

최근 몇 년 사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산업정책의 부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배경으로 일련의 역사적·구조적 사건들을 지목한다. 이러한 사건들을 거치며 정부 개입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허들(hurdle)이 점차 낮아지고, 산업정책의 역할과 정당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상시적인 정책 틀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산업정책 변화는 단기적 충격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경제·정치 환경의 격변 속에서 단계적으로 누적되어 형성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

최근의 산업정책 변화는 단기적 충격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정치 환경의 격변 속에서 누적되어 형성된 결과이다.

”

첫 번째 전환점인 2008년 금융위기는 산업정책 부활의 도화선이 되었다. 금융위기는 시장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각성과 재검토를 촉발하였고, 주요국 정부는 통화·금융정책 대응과 더불어 경제 회복과 고용 안정 확보를 위해 적극적 산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시작했다.⁵⁾ 이 시기 산업정책은 주로 경기 회복을 위한 선택적 지원정책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자동차·금융 등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이 확대되었다.⁶⁾ 즉, 산업정책이 시장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 수단으로 다시 소환된 것이다.

두 번째 전환점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본격화된 미·중 무역 경쟁이다. 미·중 무역 분쟁이 고조되면서 통상 정책은 본연의 시장개방 수단을 넘어 산업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경제안보를 둘러싼 전략적 수단으로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⁷⁾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무역법」 제301조 등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알루미늄 및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조치를 확대하였으며, 중국 역시 보복 관세와 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맞대응을 이어갔다.⁸⁾ 이때부터 산업정책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재정의되고, 산업정책의 성격이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서 ‘전략적 취약성 관리’로 확장되었다.⁹⁾

세 번째 전환점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격화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전략산업의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생산거점 다변화, 리쇼어링·프렌드쇼어링, 전략물자 비축, 국내 생산능력 확충 등의 정책을 통해 공급망 위기관리와 경제 안보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기 시작하였다. IMF는 팬데믹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며 산업정책

5) OECD, 「An industrial policy framework for OECD countries: Old debates, new perspectives」, 2022.;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6」, 2016.

6) OECD, 「Policy Responses to the Economic Crisis: Investing in Innovation for Long-Term Growth」, 2009; OECD, 「Trade and Economic Effects of Responses to the Economic Crisis」, 2010

7) WTO, 「World Trade Report 2023」, 2023.;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3」, 2023.

8) Bown, Chad P. 「US-China Trade War Tariff」,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PIIE), 2023.

9) WTO, 「World Trade Report 2023」, 2023.;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3」, 2023.

수요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팬데믹 이후 공급망 회복력 강화가 산업정책 논의를 뜨겁게 만들었다고 평가한다.¹⁰⁾ 이에 더해 2019년 말부터 WTO가 상소기구의 사실상 기능 정지로 규범적 공백과 기능 부전에 빠지면서, 그 빈자리에 주요 경제권의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산업정책과 다양한 통상 규제가 채워지기 시작했다.¹¹⁾

“

재등장한 산업정책은 ‘안보 가치’를 상위에 두고 제한적이고 대외지향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쟁 조건’과 ‘시장 구조’를 재편하는 양상을 보인다.

”

네 번째 전환점은 이러한 흐름 가운데 산업정책이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전환과 결합되면서 한층 강력한 정당성을 얻게 된 점이다. IMF는 저탄소 기술이 외부효과와 조정 실패를 수반하므로 산업정책의 경제적 명분이 특히 강하다고 평가하며, 녹색 분야를 겨냥한 정책일수록 일반 산업정책보다 경쟁력 제고와 혁신 창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한다.¹²⁾ 이와 궤를 같이하여 WTO 역시 탈탄소화를 현대 산업정책의 핵심 배경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¹³⁾ UNCTAD는 재생에너지와 핵심 에너지 전환 광물 분야에서 산업정책의 전략적 활용이 개발도상국 성장 기회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¹⁴⁾

나. 산업·통상 넥서스의 3대 핵심 축

산업정책이 다시 등장하였으나, 과거의 국가 개입과는 현저히 달라졌다. 그 형태와 작동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별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산업정책은 공급망 회복력, 국가안보, 지정학적 경쟁과 같은 안보 가치를 상위에 두고, 선택적 보조금뿐만 아니라 현지화 요건, 조달 우대, 무역제한 조치 등 보다 제한적이고 대외지향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경쟁 조건과 시장 구조를 재편하는 양상을 보인다.¹⁵⁾

IMF(2024; 2025)와 Martin(2025; 2026) 및 UNCTAD(2026), WTO(2025)¹⁶⁾의 최신 연구들은 글로벌 산업정책 변화 흐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최근의 산업정책은 단편적인 정책 조정을 넘어 통상 정책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크게 ① 산업정책의 안보화, ② 공급망의 블록화, ③ 시장접근의 조건화라는 세 가지 핵심축(3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특징들이 포착된다.

제1축: 산업정책의 안보화

#1 산업정책의 폭발적 증가 최근의 산업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조치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한번 도입된 조치가 위기 종료 이후에도 철회되지 않고 누적되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는 팬데믹 이후 비상조치들이 정부의 상시적인 정책 틀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IMF(2025a)에 따르면, 2009~2023년 기간 집계된 전 세계 산업정책 개입은 총 34,248건(누적)에 달하며, 이 중 무려 85%가 무역 왜곡적 조치로 분류되었다. 이는 글로벌 경쟁 지형이 자국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편향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개입의 주체별로는 선진국(52%)과 신흥개도국(48%)이 유사한 비중을 보이나, 특히 중국, 유럽연합(EU), 미국 등 3대 경제권이 전체 조치의 약 5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정책의 폭발적 증가의 핵심은 도입된 조치가 철회되지 않고 누적되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

10) IMF, 「Industrial Policy since the Great Financial Crisis」, Oct. 2025a.

11) 김세진,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 생존을 위한 강대국 전략」, 『생각의 힘』, 2025. 7. 11.

12) IMF, 「Staff Discussion Note, Industrial Policies: Handle with Care」, 21. Mar. 2025.

13) WTO,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25」, Chapter 5,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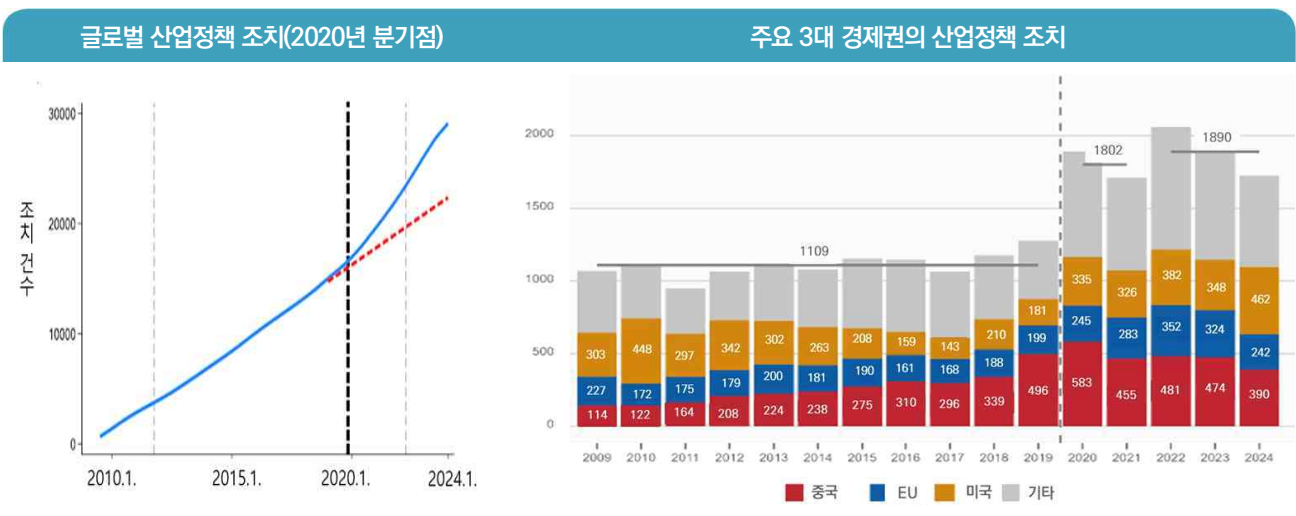
14) UNDP, 「Trade and development implications of key aspects of the energy transition」, 21. Feb. 2024.

15) Martin, Fernando, 「Security First: How Industrial Policy Changed in 2025」, Global Trade Alert, 17. Dec. 2025.

16) IMF, 앞의 글(2024; 2025a); Martin, 앞의 글(2025; 2026); UNCTAD, 앞의 글(2026); WTO, 앞의 글(2025)

Martin(2025; 2026)은 산업정책의 급격한 확대가 일어나는 분기점으로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을 지목한다. 2022년부터는 두 번째 구조적인 확대 국면이 시작되었고, 2023년 이후로는 실제 정책 개입이 기존 추세선을 훨씬 더 상회한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추세는 주요국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중국은 2020년 전후로 급증한 후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미국은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명시적인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EU도 팬데믹 이후 보조금 규제 완화 및 제도화를 통해 뚜렷한 증가를 나타냈다. 즉, 3대 경제권의 산업정책이 자국의 장기적인 재정 및 전략 계획에 통합되면서 글로벌 산업정책 조치의 대규모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그림 1 산업정책 조치 급증 추이



주: (左) 이행 시기, 붉은 점선은 추세선
 자료: (左) IMF, 「Industrial Policy since the Great Financial Crisis」, 2025a. (右) Martin, Fernando. 「Industrial Policy as Market-Shaping Competition」,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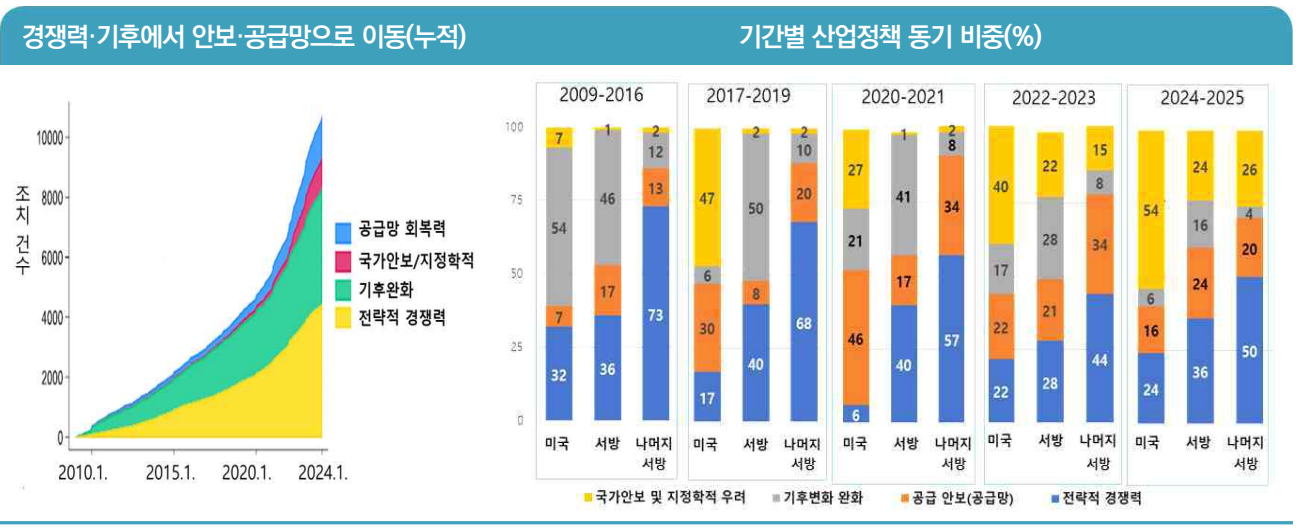
#2 동기의 재편: 경쟁력에서 안보·공급망으로의 전환 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은 주로 경쟁력 제고와 기후 대응 명분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IMF(2025a)는 2020년 이후 새로운 특징으로 공급망 회복력, 국가안보, 지정학적 고려가 산업정책의 중요한 동기로 부상했다고 분석한다. WTO 보고서도 2025년 초 이후 주요 조치가 국가안보와 경제 안보 명분 아래 도입되었다고 평가한다.¹⁷⁾ 이는 산업정책이 경쟁력 제고를 넘어 안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구성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IMF(2025a)에 따르면, 안보·지정학적 동기의 조치 중 수출장벽 비중이 2009~2019년 7%에서 2020~2023년 22%로 대폭 상승했고, 공급망 회복력 확보 목적의 조치 역시 동 기간 3%에서 13%로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그림 2〉 참조). Martin(2025)은 2024년 이후 산업정책의 구성 변화에 주목한다. 미국과 서방 경제권에서 국내 재정지원이나 보조금의 역할은 줄어드는 대신 무역 제한 조치와 기타 강압적 정책에 의존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성이 2025년 이후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¹⁷⁾ WTO, 「Trade Monitoring Update: Latest Trends」, 3 July. 2025b.

특히 미국의 산업정책이 보조금 중심에서 무역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로 이동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세 인상, 현지화 요건 강화 및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구제 조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다른 서방 경제권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된다. EU는 여전히 보조금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반보조금 조사, 역외보조금 규정(FSR) 등을 통해 규제적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2024~2025년 사이 미국 산업정책의 절반 이상이 국가안보 및 지정학적 고려를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공급 안보까지 포함하면 안보 관련 동기는 미국과 EU 등 서방 산업정책의 약 절반을 차지할 만큼 강력해졌다. 미국에서는 안보 논리가 기후 정책 논리를 압도하며 그 영향력이 더욱 커졌으며, 이는 나머지 서방 경제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정책은 이제 국내적 차원을 넘어, 외국 기업과의 경쟁 조건을 재편하는 강력한 대외 통상 수단으로 진화했음이 명확해졌다.

그림 2 산업정책 동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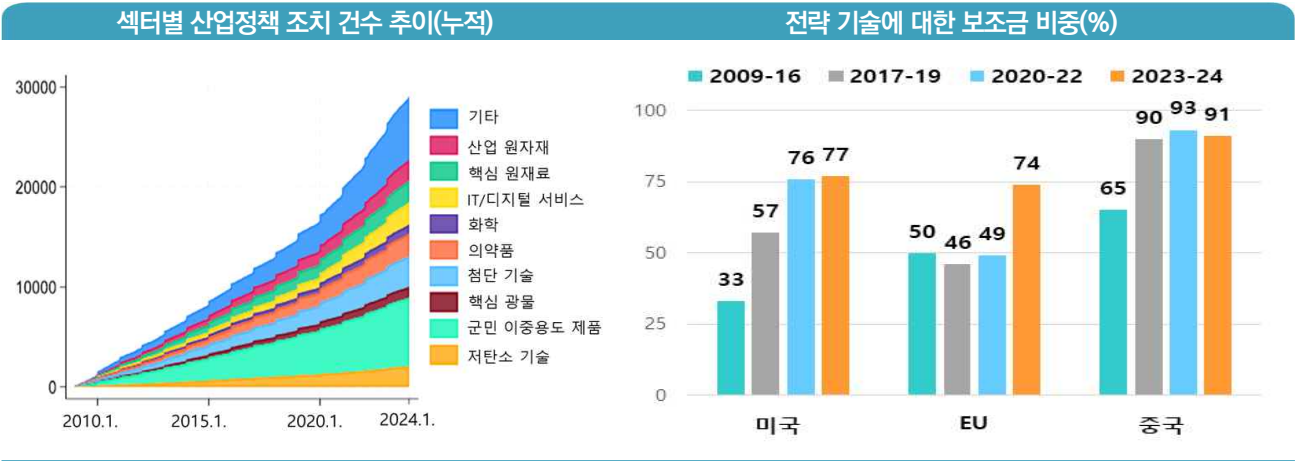


주: (左) 이행 시기, (右) 서방(West)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경제권, 나머지 서방(RoW)는 미국을 제외한 서방 경제권으로 일본, EU-27, 캐나다, 호주, 한국 포함
자료: (左) IMF(2025a), (右) Martin(2025) 저자 재구성

#3 전략적 집중과 보복적·경쟁적 확산 산업정책은 점차 전략 부문에 집중되고 있으며, 동시에 주요국 간 연쇄적 대응을 유발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IMF(2025a)에 따르면, 이중용도(dual-use) 제품과 첨단기술은 물론, 핵심 광물·화학제품·철강·알루미늄 등 산업 원자재의 상류(upstream) 투입재를 겨냥한 조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핵심 광물과 산업 원자재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정책이 전략 부문에 집중되는 현상과 관련해, Martin(2025)은 2020년 이후에는 보조금과 수출입 제한 조치가 전략 부문으로 쏠리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고, 2023~2024년에는 3대 경제권 산업정책 조치의 대다수가 이들 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Martin(2026)은 최근에는 산업정책이 전략 부문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대체 불가능한 병목 지점(chokepoint)¹⁸을 선점하고 장악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한다.

¹⁸ 공급망이나 네트워크에서 특정 기업, 기술, 인프라가 전체 시스템을 좌우하는 지점을 의미하며, 특정 국가나 기업이 독점하는 핵심기술이나 부품 등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다.

그림 3 (左)섹터별 산업정책 조치 건수 추이(누적), (右)경제권별 보조금 구성



자료: (左) IMF(2025a), (右) Martin(2026), 저자 재구성

이 같은 집중은 국가 간 정책경쟁과 보복의 연쇄로 이어지고 있다. IMF(2024)에 따르면, 중국·EU·미국 사이에서 동일한 품목에 대한 한 국가의 보조금이 1년 이내 다른 국가의 대응 보조금으로 이어질 평균 확률이 73.8%에 달한다. 또한 기존 비교우위가 높은 산업일수록 산업정책의 대상이 될 확률이 증가하고, 유망 산업 육성보다는 기존 강자 보호 및 강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또한 타국의 조치가 있었던 산업에서 후속 조치의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진단한다. Martin(2026)의 분석에서도 2020년 이후 보조금 추종률이 60~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산업정책이 국내 산업의 지원 수단을 넘어 상대국 정책에 대한 보복적(tit-for-tat)·경쟁적 대응 수단으로 적극 확산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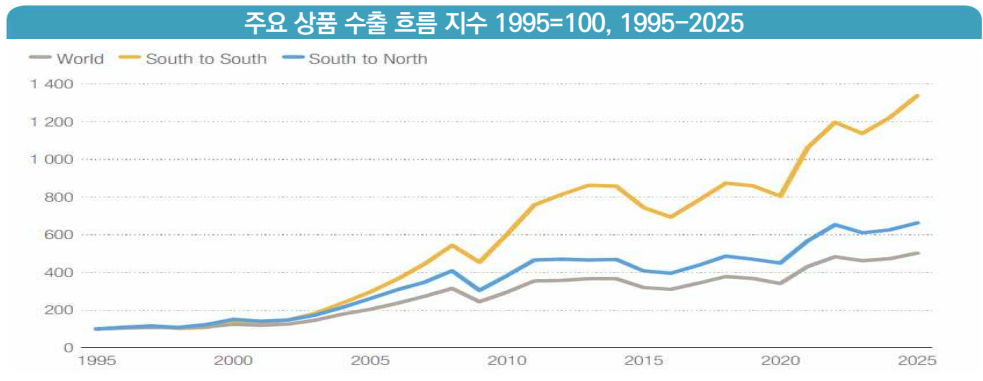
제2축: 공급망의 블록화

#4 글로벌 사우스 지정학적 레버리지 상승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위상을 높여주고 있다. UNCTAD(2026)에 따르면, 개도국 간의 남남(South-South) 상품 수출은 1995년 약 0.5조 달러에서 2025년 6.8조 달러로 14배나 확대되었으며, 현재 개도국 수출의 57%가 다른 개도국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 시장이 더 이상 선진국 시장의 ‘보조적 시장’이 아닌 ‘독자적 교역 축’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하며, 이들이 대체 생산기지이자 자원 공급처, 나아가 핵심 소비시장으로서 공급망 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남남(South-South) 교역의 확대는 미·중 전략 경쟁이 양자 대결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둘러싼 ‘다극적 공급망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특히 베트남과 멕시코 같은 ‘커넥터 국가들(Connector Countries)’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재배치 과정에서 주요한 수혜를 입으며 새로운 협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망 블록화는 과거 효율성 중심의 저비용 체제에서 안보와 회복력을 중시하는 고비용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공급망의 다변화는 대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높일 수는 있으나, 효율성 저하와 무역 성장 둔화, 그리고 특정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의존 압력을 동시에 야기하는 복합적인 도전 과제도 안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양자 대결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둘러싼 ‘다극적 공급망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림 4 남남(South-South) 교역의 흐름



자료: UNCTAD(2026)

#5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교역의 불균등 성장 전 세계 무역의 3분의 2가 가치사슬(GVC)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근의 가치사슬 재편은 과거의 단순한 ‘탈세계화’가 아닌 특정 부문과 축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재구성의 양상을 띠고 있다. WTO의 2025년 상반기 분석에 따르면, 최근의 교역 증가는 전 산업에 걸쳐 균등하게 나타나기보다는 관세 우려에 따른 수입 선행과 AI 관련 제품 수요가 이끌었다.¹⁹⁾ 특히 AI 관련 제품과 디지털 인프라, 전략 부품 등 첨단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AI 관련 제품은 전년 대비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상품 교역 증가분의 거의 절반을 견인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무역의 거점과 경로를 새롭게 창출하며 지역 및 품목별로 불균등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지경학적 재배치’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축: 시장접근의 조건화

#6 제조업 중심 관세정책의 상시화·무기화 심화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관세는 다시 제조업 보호와 전략산업 방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Martin(2026)은 최근의 산업정책이 보조금 중심의 기조를 뛰어넘어 관세와 같은 강력한 무역 제한적 조치를 병행하며 그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WTO는 2025년 초부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부품, 구리, 희토류, LNG 등 제조업 기반의 전략 부문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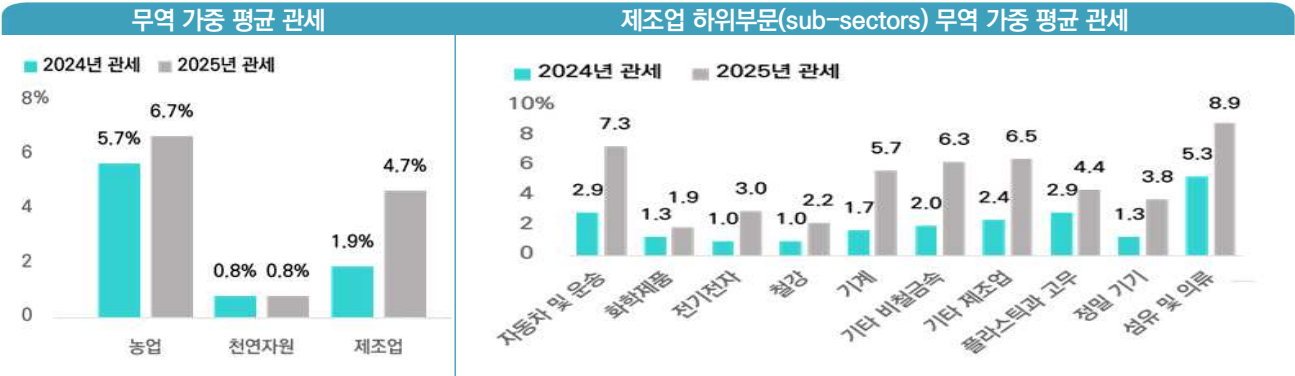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관세는 일시적 대응책을 넘어 상시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도구가 되었다. UNCTAD(2026)는 2025년 제조업 분야의 관세 사용은 지정학적 목적과 결합하면서 미국의 주도 아래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평균 관세는 국가와 품목별로 불균등하게 상승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동차 및 운송 기계, 비철금속 등 주요 제조업 하위부문 전반에서 관세 인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관세 정책이 공급망 재편, 투자 유도, 시장접근 통제까지 포괄하는 고도의 전략적 수단으로 고착화되고, 더 나아가 지정학적·안보적 목표 달성을 위한 압박 카드로 ‘무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핵심 제조업 분야에서 관세가 반복적·일상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통상 정책의 중심축도 보편적 개방에서 선별적 차단과 조건부 접근 방식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19) WTO, 「Large increase in new tariffs but also measures to ease global trade, WTO report shows」, 『Trade Monitoring』, 2 Dec. 2025c.

20) WTO, 「Report on G20 Trade Measures(mid-October 2024 to mid-October 2025)」, 13 Nov. 2025d.

“ 전 세계 평균 관세는 국가와 품목별로 불균등하게 상승했다. 특히 자동차 및 운송 기계, 비철금속 등 주요 제조업 하위부문 전반에서 관세 인상이 두드러졌다. ”

그림 5 2025년 글로벌 관세 동향: 제조업 부문 중심으로 관세 인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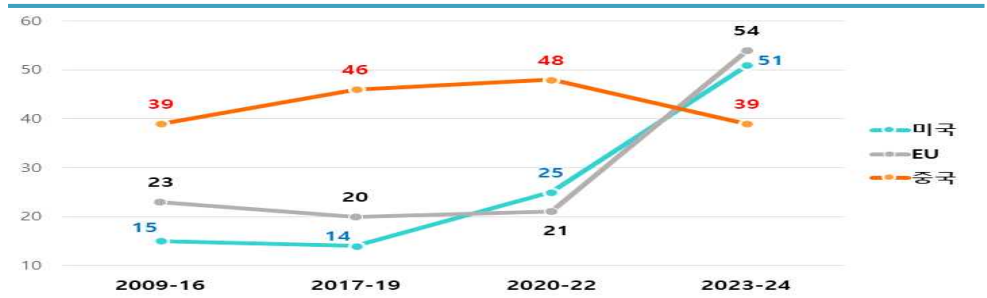
주: 글로벌 무역에 적용되는 무역 가중 평균 관세(Trade-weighted average applied tariff) = $\sum(\text{관세율} \times \text{무역액}) / \sum \text{무역액}$
 자료: UNCTAD(2026), 저자 재구성

#7 그린·디지털 조건부 접근 확대 시장접근의 조건화는 특히 그린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WTO에 따르면 환경 관련 무역 조치는 2010년 680건에서 2021년 2,250건으로 약 3배 가까이 급증했고, 세계은행은 2024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75개의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가 운용 중이라고 집계했다.²¹⁾ Martin(2026)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과 EU가 배터리·전기차·재생에너지 가치사슬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2023~2024년 사이에 관련 보조금을 50% 이상 파격적으로 증액하며 국내 제조 역량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저탄소 기술과 첨단·이중용도(dual-use) 기술의 중첩이 확대되면서, 기후 정책은 기술 주권과 공급망 회복력,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편, 디지털 및 서비스 분야에서도 시장접근 제약과 조건화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UNCTAD(2026)에 따르면, 디지털 전송 서비스는 세계 서비스 수출의 56%를 차지하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7.1%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동시에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지수는 2014년 0.168에서 2024년 0.182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또한 WTO(2025d) 분석 결과, 시장접근의 장벽은 동식물 위생검역(SPS)이나 무역 기술장벽(TBT), 서비스 규범 등 비관세 영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디지털 서비스 교역은 6.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도 신규 규제 조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글로벌 시장접근이 탄소, 기술 표준, 검역, 데이터 및 디지털 인프라와 같은 복합적인 비관세 규범의 충족 여부에 달려있음을 시사한다.

“저탄소 기술과 첨단·이중용도 기술의 중첩이 확대되면서, 기후 정책은 기술 주권과 공급망 회복력,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림 6 경제권별 전체 보조금에서 저탄소 기술 관련 보조금 비중(%)



자료: Martin(2026), 저자 재구성

21) WTO, 「World Trade Report 2023: Re-globalization for a Secure, Inclusive and Sustainable Future」, 2023.; World Bank, 「States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4」, 2024.

III

2026년 3대 경제권 산업-통상 쟁점 검토²²⁾

미국·중국·EU 3대 경제권은 WTO 다자체제 규범에서 벗어나, 자국 이익에 따라 규범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우회하는 이른바 ‘전략적 이탈’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 경제권은 각자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산업과 통상을 긴밀히 결합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를 파편화 및 재편하면서, 공통적으로는 안보·탄소·공급망·기술을 명분으로 시장접근을 엄격하게 조건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질서의 급변을 주도하고 있는 3대 경제권의 2026년 주목해야 할 산업-통상 쟁점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계 리스크 요인을 간략히 짚어본다.

가. 미국 : 안보 주도형 시장접근 조건화

미국의 산업 및 통상 정책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관세-보조금-수출통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패키지형·양자형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이후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통해 핵심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는 한편,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무역법」 제301조 등 품목 관세 및 수출통제(EAR)를 동원해 전략 품목에 대한 통제 수위를 높여왔다. 이는 안보 차원의 산업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통상 정책을 전략적으로 도구화하는 ‘조건부 시장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지난 3월 2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6년 통상 정책 의제(Trade Policy Agenda)’에는 이러한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 301조 및 232조 관세 조치의 전면화, ▲ 제조업 회귀를 통한 자국 내 생산 압박, 그리고 ▲ 상호주의에 입각한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통상 기조는 중간선거를 앞둔 국내 지지 기반 강화와 경제적 실리 확보라는 명분 아래, ‘안보’를 지렛대 삼아 이전보다 한층 일방적이고 공세적인 압박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산업-통상 정책은 ‘안보’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관세-보조금-수출 통제가 긴밀히 결합된 ‘패키지형·양자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쟁점 ①: IEEPA 위법 판결 이후 232조·301조 중심의 품목 관세 체계로 전환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모두)가 위법이라고 판결(6대 3)하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한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안보)와 「무역법」 제301조(불공정 무역관행)²³⁾를 중심으로 한 ‘산업·품목 타깃형’ 관세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IEEPA 위법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국제수지 위기 시 최대 15%, 최장 150일 부과 가능)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 포고령을 발동한 데 이어 향후 15%까지의 상향 가능성도 언급하며, IEEPA 판결 이전의 관세 수준을 사실상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²²⁾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26.1.19.)·중국('26.1.26.)·EU('26.2.3.: 한국유럽학회 공동주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6년 통상환경'을 전망하였다. 본 고 해당 절(III)에 간담회의 주요 발제 및 토론 내용을 토대로 경제권별 핵심 통상 쟁점 선정 및 관련 세부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²³⁾ 미국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조사한 뒤 보복 관세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멕시코나 동남아시아를 경유한 우회로까지 차단되는 등 ‘미국 내 직접 생산 압박’이 극대화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 수요 위축에 따른 배터리 출하량 감소와 생산세액공제(AMPC) 축소 가능성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며, 2027년 금지외국기관제도(PFE) 시행에 대비한 공급망 재편 비용 부담, 원재료의 가공·정제 단계의 탈중국화, 그리고 배터리 활용처 다변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³⁰⁾

쟁점 ③: USMCA(북미 공급망 핵심축) 6년 주기 검토 및 원산지 규정 강화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도 불구하고, 펜타닐 및 불법 이민 대응을 명분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캐나다(35%)와 멕시코(25%)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USMCA 적격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역내 공급망의 특수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2024년 기준 미-멕시코(9,351억 달러), 미-캐나다(9,091억 달러) 간 교역 규모가 증명하듯,³¹⁾ USMCA가 북미 산업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축임을 시사한다.

2026년 7월, 협정 제34.7조에 따른 첫 번째 합동 검토(Joint Review)가 개시될 예정인데, 이번 검토는 협정의 16년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 중국산 우회 수출 방지(비시장경제 조항 확대), ▲ 노동·환경 기준 미충족 시 수입 금지, ▲ 핵심 광물 개발·투자 보호, ▲ 전기차 원산지 특별규정, ▲ AI 등 디지털 서비스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³²⁾ 특히 ‘취약해진 북미 공급망 회복’을 명분으로 역내 부품 및 배터리 조달 비율을 추가 상향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USMCA 검토 결과에 따라 멕시코를 북미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해 온 한국 기업들의 현지 경영 전략(투자 및 생산 등)은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와 북미산 배터리·부품 비율 상향은 멕시코 생산기지 이점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동·환경 분야의 분쟁해결 매커니즘 강화와 중국 우회 수출 차단 조항의 적용 확대는 북미 공급망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에 고도의 컴플라이언스 대응과 공급망 재편을 압박하며, 결과적으로 미국 본토를 포함한 역내 조달 네트워크의 재편과 투자·생산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쟁점 ④: 디지털 규범 통상 쟁점화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해외 플랫폼·AI·데이터 규제(EU 시법, 한국 플랫폼법 등)를 비관세 장벽 또는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무역장벽보고서(NTE), 301조, 디지털 통상협정 등과 연계하며 통상 이슈화하고 있다. 2025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플랫폼 사전 규제와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 장벽’이자 ‘반경쟁적(Anti-trust) 조치’로 적시하며, 이를 관세 및 투자 협상과 연계해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소스코드 비공개’, ‘현지화 규제 최소화’를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³⁰⁾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전기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2025.7.21.

³¹⁾ 이상현·고석현, 「K배터리 3사, 일제히 적자...」 전기차 지우고 ESS 띄우자」, 『중앙일보』, 2026.1.12.

³²⁾ Gantz, David & Tony Payan, 「Strategic Priorities for the 2026 USMCA Review」, Baker Institute, 2. Dec, 2025.

³³⁾ 이정아·전윤식, 「최근 미국 내 USMCA 검토 논의와 주요 쟁점」, 『트레이드 브리프』, 한국무역협회, 2025.7.10.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소다자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타국의 소스코드 공개 요구를 지식재산권 침해로 간주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통상법」 제301조(불공정 무역 관행)와 같은 강력한 보복 수단을 ‘플랜 B’로 검토하는 등 상대국 압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³³⁾ 한편, 미국의 AI 정책은 사전 규제보다는 기업 자율 준수와 행정명령의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여 혁신 동력을 유지하되, 대외적으로는 자국 기업의 글로벌 활동 공간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가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경우, 국내 정책 결정권이 위축되고, 시장 구조가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국내 AI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해외 플랫폼 의존도 심화, 이용료 부담 가중, 원천기술 종속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쟁점 ⑤: 대외 변동성에 대비한 대미 투자 이행 환경 관리

2026년 3월 12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한미 투자 합의가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지난 1월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면서 관세 인상과 연계하여 대미 투자 압박 수위를 높인 이후 약 1.5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이다. 향후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수치 제시를 넘어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 및 양자컴퓨팅 등 핵심 안보 관련 개별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 속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본이 1차 사업 확정에 이어 원전·구리·정련·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한 2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며,³⁴⁾ 한국 정부 역시 하위법령 마련과 전담 펀드 조성 등 이행 체계 마련에 착수했지만, 특별법 시행 전까지는 사업 확정과 통상 압박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대미 투자는 사업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경제적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 변화, 미·이란 전쟁 장기화와 에너지 가격·물류비 변동, 미국의 관세정책 재조정 등으로 투자 인센티브와 사업 환경이 수시로 급변할 수 있는 만큼, 대미 투자 이행과 함께 대외 변동성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나. 중국 : 산업자립·공급망 내재화와 제도형 개방

중국은 내부의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미 경쟁 국면에서 과거와는 차별화된 전략적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제15차 5개년 계획³⁵⁾을 기점으로 중국의 산업정책은 단순한 공급망 안정과 기술 자립의 차원을 넘어, ‘기술의 산업화’, ‘전통 제조업의 전략 자산화’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산업 질서와 공급망, 그리고 국제 규범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단순한 시장개방이 아닌 ‘규범·표준·공급망’ 중심의 ‘제도형 개방’에 있다. 중국은 희토류·게르마늄·흑연 등 핵심 광물·소재를 무기화할 수 있는 독보적 위치를 점유

33) 김성민,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빅테크들 ‘규제 방패’ 되나」, 『조선일보』, 2026.3.12.

34) Reuters, 「Exclusive: Japan, US aim to add nuclear power project to \$550 billion investment package, sources say」, 4 Mar. 2026.

35) 중국의 5개년 계획은 국무원과 공산당이 약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 중장기 발전 청사진으로, 국가 발전 목표와 산업·기술·에너지·안보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 수준의 전략 문서이다. 보통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되며, 해당 시기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과 전략산업 육성 방향을 읽는 핵심 기준이 된다.

“ 중국은 단순히 시장개방이 아닌 ‘규범·표준·공급망’ 중심의 ‘제도형 개방’을 꾀하면서, 전통 제조에서 첨단제조까지 ‘자기완결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하고 있으며,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모두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전통 제조에서 첨단 제조까지 ‘자기 완결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미·중 관계는 핵심 기술 안보 영역은 엄격히 통제하되 비핵심 영역에서는 제한적 연계를 유지하는 ‘관리된 분리(managed divergence)’ 혹은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갈등의 축도 관계가 아니라 ‘표준·공급망·제도의 복합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쟁점 ①: 제15차 5개년 계획의 전략적 전환과 ‘신질생산력’ 강화

중국은 산업정책을 ‘전략산업의 자립(국산화)’과 ‘공급망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15차 5개년 계획(이하 15.5 계획)’은 특정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산업·공급망·재정·안보·대외전략을 포괄하는 국가 시스템 전환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5.5 계획 국면에서는 ‘신질생산력(첨단·녹색·스마트화) 전략’³⁶⁾을 바탕으로 글로벌 산업 질서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중국의 깊은 고민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수세적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에 주력했던 14.5 계획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 AI 등 전략 분야의 국산화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술 자립과 국산화가 국가 최우선 과제로 격상되었다.

15.5 계획의 중점은 핵심 광물 등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외부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공급망 수직계열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주권의 제도화’에 있다.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의 수출허가제를 상시화하여 통상 정책을 무기화하는 한편, 제조업 전반에 시를 결합한 스마트 공정 전환을 강제하여 생산성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³⁷⁾ 특히 이번 15.5 계획에서 산업정책의 핵심 원칙과 중점 목표로 ‘국가안보’가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는 데이터 규제와 중국 주도의 기술 표준 설정을 통해 글로벌 규범을 재편하려는 ‘기술 주권의 제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³⁸⁾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기술 추격과 공급망 배제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주력 산업에 대한 국산화 가속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은 물론, 제3국 시장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는 국내 부품·소재 기업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 공략, 기술우위를 통한 격차 확보와 함께 아세안·인도·미국·EU 등으로 생산·조달 축을 넓히는 ‘차이나+α’ 전략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병행해야 한다.³⁹⁾

쟁점 ②: 핵심광물 등 수출통제의 상시화와 공급 불확실성 확대

중국은 2023년 갈륨·게르마늄 및 흑연을 시작으로, 2024년 안티몬·초경질소재, 2025년에는 텅스텐 등 5개 핵심 광물과 일부 중희토류 관련 품목, 그리고 10월에 희토류 12개 원소에 이르기까지 통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6년 들어서는 ‘이중 용도(dual-use)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최종

36) 신질생산력이란 전통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나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중심의 첨단화녹색스마트화 성장으로 전환하고 중요소생산성을 높여 혁신이 주도하는 지속가능성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37) Xinhua, 「CPC plenum concludes, adopting recommendations for China’s 15th Five-Year Plan」, 23. Oct. 2025.; Xinhua, 「Chinese lawmakers approve outline of 15th Five-Year Plan」, 12. Mar. 2026.

38) KOTRA 베이징무역관, 「중국, 15.5 계획 건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해외시장뉴스』, 2025.11.10.

39) 앞의 글.

사용자와 최종용도 심사를 한층 강화했다. 현재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와 흑연 정·제련 공급에서 90%를 상회하는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핵심 광물에서도 글로벌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등 구조적 우위를 바탕으로 핵심 광물의 전략 자산화가 심화되고 있다.⁴⁰⁾

2026년의 조치들은 과거의 일시적 수출 제한과 달리,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조례」를 근거로 법적 체계를 완비하며 행정 절차의 상시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허가 대상 품목을 세분화하고 최종사용자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수출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중국은 15.5 계획의 핵심인 신질생산력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을 단순 수출하기보다, 자국 내에서 정련·제련하여 고부가가치 중간재로 가공한 뒤 수출하는 구조를 강제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수출 허가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확대되었고, 특히 군사적 최종사용에 대한 수출 금지 유지와 불투명한 허가 기준은 실질적인 공급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은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 흑연의 90% 이상, 희토류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허가 지연이나 중단 조치 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6년부터 도입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성격의 규정은 중국산 광물을 사용한 한국 제품이 제3국으로 수출될 때도 중국 정부의 간접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의 이행과 함께, 폐배터리 등 자원 재활용 기술을 고도화하여 자생적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쟁점 ③: 데이터 국외 이전·디지털 규제의 실질 집행 강화

중국은 2026년 1월 1일 개정 「사이버보안법」 시행을 통해 사이버·데이터 규제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기존의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AI 관련 규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촘촘하고 다층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였다. 개정 「사이버보안법」은 ‘AI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을 법적 조항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춘 상시 집행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⁴¹⁾ 핵심 쟁점은 인증제도의 본격화와 징벌적 제재의 현실화이다. 과거에는 표준계약(SC) 방식 위주였다면, 2026년부터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제도’가 실무적인 핵심 수단으로 본격 작동된다.⁴²⁾ 아울러 개정 「사이버보안법」은 법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심각한 위반 시 서비스 중단, 폐쇄 또는 라이선스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을 개선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중국 내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한국 제조기업들도 강화된 규제 영향권에 놓이게 되었다. 인사·고객·공급망 데이터는 물론, 자율주행 등 AI 연계 산업의 설비·운영 데이터를 한국 본사와 공유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리스크가 불가피해졌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제조·서비스 전반에 디지털 통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⁴³⁾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통합 거버넌스 체계에 대응

40) 김동수, 「미국과 유럽의 핵심광물정책 및 우리의 대응 방안」, 『i-KIET 산업경제이슈』, 제202호, 산업연구원, 2026.

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PA, 「중국 사이버보안법 개정을 통한 AI 규제 강화 추진」, 『글로벌 ICT 주간 동향』, 2025.10.28.

42) 법률신문, 「2026년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 분석 리포트」, 2026.

하기 위해 자사 데이터의 국외 이전 방식을 전면 점검해야 하며, 개정 법령에 부합하는 보안 위험 모니터링 체계를 신속히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명확화 등 중국 특유의 디지털 생태계에 맞는 별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⁴⁴⁾

쟁점 ④: 개정 대외무역법 3월 1일 시행과 보복 권한 법제화

중국은 「수출관리법(2020)」과 「반외국제재법(2021)」을 근간으로 다져온 규제 체계를 2026년 「대외무역법」 개정 및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조례」 시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⁴⁵⁾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외무역을 단순한 경제 행위를 넘어 ‘국가 전략’ 차원으로 격상시킨 데 있으며, 특히 외국의 차별적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보복 권한의 법제화에 있다. 실제 중국은 2026년 1월부터 일본을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를 최초 단행하며, 이러한 법적 근거를 무기화할 수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외무역법」(총 11장 83조)는 안보의 범주에 ‘국가발전 이익 수호’를 명시함으로써, 군사적 위협이 없더라도 외교적 갈등이나 무역 분쟁 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국내법에 근거해 보복적 수출입 제한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함께 시행되는 「이중용도 물품 통제 조례」는 규제 대상을 단순 제품에서 금융, 물류 등 관련 서비스까지 확대하였고, 제3국에서 중국산 통제 기술을 사용해 생산된 제품까지 추적·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역외 적용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무역 조정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피해 기업에 세제 혜택과 재정자원을 제공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⁴⁶⁾

개정 「대외무역법」이 수출통제·상응조치·역외 적용 등을 포괄하면서 중국이 제도적 규제 수단을 다각화한 것은 한국 산업계에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대외무역법」은 「수출관리법」 등과 묶여있는 종합 패키지 법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한국 기업은 對중국 무역·투자 과정에서 중국의 법제 변화에 더 민감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기계·장비, 화학, 물류·금융 등 이중용도 연관 업종은 향후 수출입 제한과 통관 지연, 거래 중단은 물론, 제3국 생산품에 대한 연쇄 제재 가능성까지 상존하게 되었다.

쟁점 ⑤: 디지털 위안화(e-CNY) 무역 결제 확대와 신흥 통상 이슈 부상

중국은 인민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e-CNY)의 활성화를 위해, 단순 결제 수단인 ‘디지털 현금’의 단계를 넘어 상업은행 예금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디지털 예금 화폐’ 지위를 부여하는 행동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⁴⁷⁾ 이에 따라 e-CNY는 이자 지급이 가능한 금융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고, 2026년 3월 현재 취급 은행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1월까지 e-CNY 거래 규모는 16.7조 위안(2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했고, 나아가 중국 주도의 다국적 디지털 통화 플랫폼(mBridge 등) 거래가 2026년 1월 기준 550억 달러를 돌파하며, 대외 결제망에서 디지털

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PA, 앞의 글.

44) 앞의 글.

45) 세계법제정보센터,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개정」, 2026.2.13.

46) 신용현, 「중, 개정 대외무역법 내일 시행...반제재 조치 명문화」, 『한국경제』, 2026.2.28.

47) 권수현, 「中 ‘디지털 위안화’ 예금화폐로...내년부터 이자도 지급」, 『연합뉴스』, 2025.12.30.

위안화의 사용 기반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⁴⁸⁾ 이러한 e-CNY의 진화는 결제 인프라의 재편·위안화 국제화·데이터 거버넌스와 결합하며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디지털 통상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e-CNY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중국의 데이터 보안 규제와 결합된 디지털 통상 인프라라는 점에서,⁴⁹⁾ 향후 한중 무역 관계에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EU는 산업정책과 통상 정책을 ‘규범 기반 조건화’ 방식으로 결합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

다. 유럽연합 : 규범을 통한 ‘시장 접근 조건’ 재설계 및 ‘전략적 자율성’ 확보

환경과 노동 등 글로벌 규범을 확산시키며 ‘규범 수출자’를 자처해온 EU는 산업 정책과 통상 정책을 ‘규범 기반 조건화(regulatory conditionality)’ 방식으로 결합하며 전략적 자율성⁵⁰⁾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역외보조금 규정(FSR), 통상 위협 대응조치(ACI)를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및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과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잇달아 도입하며, 역대 산업 보호와 공급망 통제를 위한 실리적 조치를 구체화하는 추세이다. EU 규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규제의 ‘강화’ 자체가 아니라 ‘변동성’과 ‘중첩성’에 있다. 현재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포함한 주요 지속 가능성 규제들의 입법과 이행 일정을 조정하며 속도 조절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규범 체계가 공급망 실사와 디지털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규범 준수 자체가 시장 접근의 필수 요건이자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쟁점 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될 때, 해당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는 EU 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역외 기업에도 적용함으로써 ‘탄소 누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CBAM은 2023~2025년까지의 전환 기간(탄소 배출량만 의무 보고)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최근 역내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인증서 의무 구매 시행 시점은 1년 유예되었다. 제도가 본격 시행 되면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의 수입업자는 직접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EU ETS 가격에 연동)’를 의무적으로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

EU 규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강화’ 자체가 아니라 ‘변동성’과 ‘중첩성’에 있다.

”

간접 배출량 포함 시점은 2029년 이후로 전망되나, 현재의 관건은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과 지불 비용의 공제 여부이다. 이제는 단순 추정치가 아닌 제3자 검증을 거친 실제 배출량 보고가 원칙이며,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등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 인증서 구매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더 우려되는 지점은 EU의 규제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12월 EU 집행위는 CBAM 개정안을 통해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계측기기 등 다운스트림 품목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는

48) Reuters, 「China to allow more banks to handle digital yuan, sources say」, 20 Mar. 2026.

49) IM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Further Navigating Challenges and Risks」, Nov. 2025.

50) 전략적 자율성이란 지정학적 고려가 필요한 문제에서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선택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전략적 자율성 개념은 안보 분야에서 사용되었지만 2017년부터는 점차 산업, 무역, 디지털, 에너지, 기후변화 등 다양한 정책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산업정책 분야에서 그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 미국과 유럽 관계가 더 이상 단선적 협력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유럽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한·EU 통상 전망 간담회 토론문 발췌).

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EU는 2030년까지 EU ETS⁵¹⁾에 포함된 모든 품목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⁵²⁾

한국 기업들은 철강과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8년부터 신규 추가될 다운스트림 품목의 94%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CBAM의 영향은 203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對EU 수출 물량은 최대 18%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다.⁵³⁾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공급망 유지 능력이다. 만약 EU 수입업자에게 정확한 탄소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공급망 배제 위험이 있으며, 높은 '기본값(default value)'이 적용될 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쟁점 ②: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에 따른 공급망 실사 의무 단계적 시행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이 자사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 및 환경 리스크를 식별·시정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2026년 2월 개정으로 적용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역외 기업을 포함한 실질적인 준수 의무는 2년 유예되어 2029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본 지침의 핵심은 6단계 공급망 실사 프로세스 구축을 '법적 의무'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다만, 'Omnibus I' 개정에 따라 EU 차원의 민사책임 체계가 일부 완화되었으며, 피해자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또한 각 회원국의 국내법 이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⁵⁴⁾ CSDDD는 EU 내 순 매출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들의 공급망에 편입된 중소·중견기업까지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하고 있다. 지침 위반 시 행정 제재는 물론, EU 역내 주요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⁵⁵⁾

따라서 기업들은 실사 정책 수립부터 부정적 영향 식별·평가, 예방·완화 조치,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지표 마련 등 '6단계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시스템 운용 과정과 실질적인 관리 성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자사 및 협력사의 리스크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고도화된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실사 보고서 발간과 공급망 내 투명한 데이터 관리 역량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대비가 필수적이다.⁵⁶⁾

쟁점 ③: 핵심원자재법(CRMA) 본격 시행과 공급망 다변화

EU의 「핵심원자재법(CRMA)」은 리튬, 희토류 등 전략적 원자재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공급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이다. 2024년 5월 발효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3월과 6월 첫 번째 '전략 프로젝트' 명단을 확정하고, 신속한 허가절차와 자금조달 지원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들어갔다. CRMA는 2030년까지 각 전략원자재의 단일 제3국 의존도를

51) EU ETS는 발전, 정유, 철강,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속한 1만여 개 사업에 적용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시장이다.

52) 권선형, 「2030년 CBAM 전면 확대... 석유화학·플라스틱도 사정권」, 『매일일보』, 2025.8.10.

53) 이관재, 「EU의 CBAM 시행이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역협회, 2026.3.23.

54) EU, Directive (EU) 2026/470 (Omnibus I), Feb. 2026. <<https://eur-lex.europa.eu/eli/dir/2026/470/oj>>

55) White & Cas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after Omnibus I Package」, 6 Mar 2026.

56) 대한상공회의소, 「EU CSDDD와 공급망 관리 전략」, 2026.2.

65% 이하로 낮추고, 채굴 10%, 가공 40%, 재활용 25%의 역내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⁵⁷⁾ 대기업 중 전략기술 생산기업에는 공급망 리스크 평가와 대응 계획 수립 등 위험 대비 의무가 부여되며, 원자재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원자재의 추적성, 재활용 정보, 공급망 데이터 관리 요구는 CRMA 뿐만 아니라 배터리 규정 및 에코디자인 관련 ‘디지털 제품 여권(DPP)’ 체계와 맞물려 기업의 규범 대응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⁵⁸⁾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등 소재 산업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자재 원산지 추적 시스템 구축과 수입선 다변화 등 중국 의존 완화 공급망 전략이 시급하다.⁵⁹⁾ 이와 병행하여 폐배터리·폐전자제품 재활용 기술 고도화를 통해 국내 이차원자재 공급망 구축과 재활용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전략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EU의 전략 프로젝트 참여와 EU 역내 폐배터리 재활용 거점 확보를 통한 역내 조달·재활용 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⁶⁰⁾

쟁점 ④: 역외보조금 규정(FSR) 집행 강화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은 EU 역외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역내의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그간 엄격한 보조금 규제를 받아온 EU 역내 기업들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정부 지원을 받아온 역외 기업 간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6년 1월 EU 집행위가 공개한 최종 가이드라인은 왜곡 판정 기준, 균형 테스트(긍정/부정 효과 비교), 그리고 지난 3년간 외국보조금 수령액이 400만 유로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위의 call-in(사전신고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다.⁶¹⁾ 본 규정의 핵심은 단순히 보조금 지원 사실 자체를 규제하기 보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왜곡 효과’ 여부에 있으며, 해당 자금이 공격적인 입찰이나 시장 점유율 확대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었는지 정밀하게 심사한다.⁶²⁾

한국 기업들이 받은 국책금융, 세제 혜택 등이 외국 재정기여 또는 역외보조금으로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EU 내 M&A나 대규모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배터리, 원전, 방산 등 전략산업 기업들은 이미 실질적인 조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신고의무 위반이나 시정조치 불이행 등 중대한 규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⁶³⁾ 따라서 기업들은 최근 3년간의 지원 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자사 활동의 EU 경제 및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기여도를 정량화하는 한편, 예상치 못한 조사 지연에 대비한 계약상 보호 조항도 정비하는 등 실무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 확보가 시급하다.⁶⁴⁾

57) EC, 「Announcement of Strategic Projects」, Feb. 2026; KOTRA, 「EU CRMA 전략 프로젝트 추진 동향」, 2025.

58) 한아름, 「EU 핵심원자재법(CRMA) 주요 내용과 영향」, 한국무역협회, 2023.4.19.

59) White & Case, CRMA: Managing dependencies, Feb. 2026.

60) 안상민, 「EU 핵심원자재법(CRMA)과 전략 프로젝트, 국내 공급망 출구 전략은」, 『배터리 투데이』, 2025.8.19.

61) EC, 「Guidelines on the FRS application」, 9 Jan 2026.; Hogan Lovells, 「EU FSR Guidelines Analysis」, Jan. 2026.

62) McDermott Will & Emery, 「FSR Guidelines 2026: “Safe Harbors” for call ins」, 14 Jan 2026.

63) White & Case, 「The FRS Guidelines: What business needs to know」, Jan. 2026.; 법무법인 율촌, 「FSR 가이드라인 발표와 시사점」, 2026.2.

64) KBA Europe, 「EU 역외보조금규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026.1.

쟁점 ⑤: EU의 AI법 2026년 8월 본격 시행

EU의 AI법은 위험 수준(금지, 고위험, 저위험, 최소위험)에 따라 AI 시스템을 차등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체제이다. 2024년 8월 발효 이후, 2025년 2월 ‘금지 대상 AI 관행’이 시행 되는 등 단계별 시행을 거쳐, 2026년 8월부터는 교육·채용·의료 등 분야의 고위험(high-risk) AI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행된다.⁶⁵⁾ 핵심 쟁점은 AI의 투명성과 인간의 통제권 확보이다. 고위험 AI는 설계 단계부터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인간 감독 등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 생성형 AI와 GPAI 모델에는 투명성 및 저작권 관련 의무도 적용된다. 특히 범용 AI(GPAI) 모델은 학습 데이터 요약본 공개 등 저작권 관련 투명성 의무가 강화된다.⁶⁶⁾

한국 기업은 EU 역내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3국에 설립되어 있더라도 그 AI 시스템 산출물이 EU에서 사용되는 경우, 역외 적용 원칙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된다.⁶⁷⁾ 자사 서비스가 고위험 AI로 분류되면 적합성 평가, CE 마킹,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⁶⁸⁾ 따라서 기업들은 자사 AI 시스템의 위험 등급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데이터 편향성 제거 및 기술 문서화, 인간 감독 등 AI 규제 준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EU의 최신 표준 규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술적·법적 안전장치 확보가 시급하다.⁶⁹⁾

표 1 3대 경제권 쟁점별 리스크 진단

	주요 쟁점	리스크 요인
미국	• IEEPA 미 대법원 위법 판결	• 관세 정책의 법적 불확실성 확대, 232·301조 중심 기존 관세 체계로 전환
	• 232·301조 조사 확대 및 품목 관세 전환	• 고율 관세 부담 확대, 원재료·중간재까지 심사 확대, 비관세 이슈와 연계
	• USMCA 검토 결과	• 원산지 규정 강화 및 북미 역내 조달 비율 상향 가능성
	• 대미 투자 이행 압박	• 투자 이행 가속 압박 및 미국 국내외 정치·경제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
중국	• 제15차 5개년 계획과 신질생산력 강화	• 기술자립·국산화 가속에 따른 중국 시장 내 경쟁 심화 및 공급망 배제 우려
	• 핵심광물 수출통제 상시화	• 희토류·흑연 등 공급 불확실성 확대, 원가 상승 및 수급 차질 위험
	• 데이터 국외 이전·디지털 규제 강화	• 본사·현지 간 데이터 이전 제약, 제조·서비스 전반의 디지털 통상 비용 상승
	•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과 보복 권한 법제화	• 수출입 제한·통관 지연·거래 중단 및 제3국 경유 거래 리스크 확대
EU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 탄소 비용 부담 확대, 배출량 검증 미비 시 對EU 수출에 불이익 발생 우려
	•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단계적 시행	• 공급망 실사 의무 확대, 미준수 시 제재 및 EU 공급망 배제 가능성
	• 핵심원자재법(CRMA) 본격 시행	• 탈중국 원자재 조달 압박, 원산지 추적·공급망 투명성 부담 확대
	• 역외보조금규정(FSR) 및 AI법 집행 본격화	• 제3국의 국책금융·세제 혜택이 FSR 심사 대상 가능성 확대, 공공인찰·M&A 규제 강화, 고위험 AI의 적합성평가·문서화·등록 및 과징금 리스크 확대

65) EC, 「Guidelines on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High-Risk AI Classification」, Feb. 2026.

66) EC, 「AI Act: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regulatory-framework-ai?utm_source>

67) 채은선, 「EU AI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디지털 법제 Brief』,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7.15.

68) 최현웅, 「EU AI 법안의 도전과 기회: 2026년 8월 고위험 시스템 규제 본격화」, 『시사데이즈』, 2026.2.27.

69) 앞의 글.

IV

결론 : 시사점 및 정책·입법 과제⁷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자유무역은 명분과 개념으로서 여전히 유효하지만, 실질적인 작동 방식은 산업 정책을 기반으로 한 국가 전략과 통제의 다양한 조합과 조건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특히 미국·중국·EU 3대 경제권은 자국의 핵심 산업 보호와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보’를 통상 규범의 최상위 가치로 격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 ‘조건부 시장접근’이라는 새로운 통상 문법을 써 내려가고 있다. 이제 기존의 정책 틀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분절된 대응이 아닌, 산업-통상을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로 파악하는 넥서스 관점의 전환과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가. 시사점 : 통상을 재정의하는 5가지 관점

첫째, 통상의 개념 변화이다. 과거의 통상 리스크가 단기 비용을 야기하는 ‘일시적 돌발 변수’였다면, 이제는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상시적 경영 변수’가 되었다. 따라서 통상을 단순한 교역 차원을 넘어 안보와 산업 정책이 응축된 고도의 전략 영역으로 인식해야 하며, 통상 리스크를 단순한 ‘매물 비용’이 아닌 핵심적인 ‘전략 변수’로 재정의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다자 규범의 후퇴와 ‘관리 무역 시대’의 도래이다. WTO 분쟁 해결 기능의 마비는 통상 분쟁의 예측 가능성 상실을 의미하며, 각국의 정책적 선택과 강대국의 논리(힘의 관계)가 결과를 좌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이제는 다자체제의 규범 공백을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산업정책이 메우고 있는 만큼, 보조금과 무역구제 조치 등을 전략적으로 결합한 패키지형 통상 대응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

셋째, 비관세 조치의 급증이다. 최근의 통상 장벽은 환경·디지털·노동 및 공급망 실사 등 비관세 영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으며, 기업의 수출 성과 또한 정책 변수에 구조적으로 종속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관세 규범들이 시장 진입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업의 규범 대응 역량이 시장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넷째, 경쟁의 성격 변화이다. 오늘날의 통상 경쟁은 단순한 가격 우위를 넘어 제도, 규범, 그리고 공급망 접근권을 둘러싼 복합 경쟁이다. 특히 공급망의 병목 지점(chokepoint)을 장악하는 전략 기술과 원자재 확보 역량은 이제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에서 국가의 위상과 협상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형 통상 질서의 부상이다. 주요 경제권은 관세·보조금·수출통제·투자심사·원산지·공급망 등을 하나의 단일 포트폴리오로 통합 운영하는 ‘전략적 통상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통상·안보의 경계가 해체된 통합적 정책 설계와 전방위적인 대응 역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⁷⁰⁾ 국외입법조사처에서 개최한 2026년 통상 전망 간담회 발제 및 토론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본문 ‘가. 시사점’ 부분은 2026년 한미 통상 전망 간담회(‘26.1.19.) 토론문 내용(허정 서강대 교수) 일부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이제 기존의 정책 틀만으로는 변화된 환경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
전환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 넥서스 관점의 전환과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나. 국내 정책 및 입법 과제

첫째, 산업-통상 통합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주요 경제권이 관세·투자·구매약정·원산지·공급망을 단일 협상 패키지로 결합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산업 지원과 통상 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전략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산업정책의 성패는 통상·경쟁정책과의 정합성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다.⁷¹⁾ 따라서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중장기 산업-통상 전략을 공동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급망 다층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중 전략 경쟁과 지역 블록화 심화 속에서 특정 시장이나 단일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층적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UNCTAD 보고서가 글로벌 공급망의 '지역화'와 '다극화'에 따른 분절화 경향을 분석한 것처럼,⁷²⁾ 한국도 미국·유럽 중심의 첨단 산업 공급망과 동남아·인도 등 신흥국 중심의 생산거점 네트워크를 병행·강화하는 이원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규범 대응 역량을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내재화해야 한다. CBAM, 공급망 실사, AI 규제 등 신규 통상 규범은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시장 진입의 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다. WTO와 OECD가 환경·디지털 규범을 향후 무역 정책의 핵심축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⁷³⁾ 탄소 배출 데이터 관리와 ESG 공급망 체계, AI 규제 대응 등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탈탄소라는 역행할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여, 친환경·저탄소 기술에 대한 국가적 R&D 지원 체계를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넷째, 병목 지점 산업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반도체 소재, 핵심광물 가공, 첨단 장비 등 전략 산업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는 공급망 안정성과 통상 협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요소이다. IMF는 공급망 경쟁에서 기술 병목을 선점한 국가가 장기적으로 압도적인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⁷⁴⁾ 따라서 핵심광물 확보와 반도체 소재·장비·부품 산업 육성을 긴밀히 연계하는 산업 정책과 함께 세제 지원, 금융 혜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망라하는 포괄적 정책 패키지의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통상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주요국의 산업·통상 정책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개별 기업 차원의 정보 파악과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주요국 정책 동향, 통상 분쟁, 공급망 리스크를 통합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와 분석 정보는 향후 국가 산업 정책 설계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정책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과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회의 통상 거버넌스 및 통제·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은 과거의 '시장개방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디지털 통상·공급망·기술협력 등 새로운 유형의 신규 협정들과 비구속적 형식의 합의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71) OECD, 「An Industrial Policy Framework for OECD Countries: Old Debates, New Perspectives」, No. 127. May. 2022.

72) UNCTAD, 「Top trends redefining global trade in 2026」, 『Global trade update』, Jan. 2026.

73) WTO, 「Aid for Trade in a changing global context」, 2024; OECD, 「Key Issues in Digital Trade」, Oct. 2023.

74) IMF, 「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y in Data」, 『Working Paper』, Jan. 2024.

따라서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국가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합의를 법적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⁷⁵⁾

둘째, 통상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글로벌 통상의 중심축이 제도와 규범 경쟁으로 이동함에 따라, 규범 충돌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역시 보다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덤핑·수출통제·보복조치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상시 점검 및 적기 보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산업·통상·조세 규제가 중첩되는 상황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 원칙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EU의 환경보조금 논리 등을 참고하여 환경 목적의 국내 지원 정책이 국제 통상 규범과 정합성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 설계를 더욱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통상-안보 결합에 대응하는 법제 정비가 요구된다. 공급망 리스크관리와 전략 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현행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토대로, 부처 간 정보 공유와 민관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운영 지침을 정비하고, 부처 간 연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예컨대,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중심으로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전성 확보, 첨단기술 관민 협력, 특히 비공개를 망라하는 경제안보 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통제와 기술 유출 대응은 「외환 및 외국무역법」 등 관련 법제와 연계하고 있다. 한국도 기술-인프라-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입법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일본이 민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 공유 구조와 보조금·금융 지원 등 지원 조치를 결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⁷⁶⁾

마지막으로, 개별 법령의 실효성 있는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의 정합적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통상조약법」 상 국내산업 보완 조치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 지원 체계 간 기능적 중복과 산업계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통합적 법제 설계가 필요하다.⁷⁷⁾ 아울러 「대외무역법」의 보완을 통해 수출통제 품목 및 관련 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제 보완을 통해 부처별로 분산 추진 중인 해외 탄소규제 대응 지원을 상시적·통합적인 제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개별 사업 중심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026년 현재, ‘상호 신뢰’와 ‘선의’에 기반했던 과거의 자유무역 체제는 그 효력이 다해가고 있다. 비야흐로 글로벌 통상 질서의 거대한 재편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한국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통합적 안목과 치밀한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요 경제권이 자국 이익에 입각한 ‘전략통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통상 리스크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완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 통합 전략, 공급망 다층화, 탄소·디지털 규범 대응, 전략 기술 확보를 아우르는 정책과 입법을 병행하며 범정부 패키지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국회 소속기관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연구조정협의회에서 선정된 2026년 3월 공동연구주제 “산업통상”에 부합하는 세부 연구내용을 각 소속기관별로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75) 권현호·오선영·이주형,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5-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6.1.

76) 허재철 외, 「미·중 전략경제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

77) 권현호 외, 앞의 글(2026).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PA, 「중국 사이버보안법 개정을 통한 AI 규제 강화 추진」, 『글로벌 ICT 주간 동향』, 2025.10.28.
- 권선형, 「2030년 CBAM 전면 확대... 석유화학·플라스틱도 사정권」, 『매일일보』, 2025.8.10.
- 권수현, 「中 ‘디지털 위안화’ 예금화폐로... 내년부터 이자도 지급」, 『연합뉴스』, 2025.12.30.
- 권현호·오선영·이주형,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5-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6.1.
- 김동그라미, 「IEEPA 판결 이후, 관세 전략 재편하는 트럼프 행정부」, 『해외시장뉴스』, KOTRA, 2026.3.
- 김동수, 「미국과 유럽의 핵심광물정책 및 우리의 대응 방안」, 『KIET 산업경제이슈』 제202호, 산업연구원, 2026.
- 김성민,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빅테크들 ‘규제 방패’ 되나」, 『조선일보』, 2026.3.12.
- 김세진,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 생존을 위한 강대국 전략』, 생각의 힘, 2025.7.11.
- 김앤장 법률사무소,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주요 내용」, 『뉴스레터』, 2025.7.8.
- 김은중, 「미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한국 등 16개국 추가 관세 목적」, 『조선일보』, 2026.3.12.
- 나상현·고석현, 「K배터리 3사, 일제히 적자... 전기차 지우고 ESS 띄우자」, 『중앙일보』, 2026.1.12.
- 법률신문, 「2026년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 분석 리포트」, 2026.
- 대한상공회의소, 「EU CSDDD와 공급망 관리 전략」, 2026.2.
- 신용현, 「중, 개정 대외무역법 내일 시행... 반제재 조치 명문화」, 『한국경제』, 2026.2.28.
- 세계법제정보센터,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개정」, 2026.2.13.
- 이정아·전윤식, 「최근 미국 내 USMCA 검토 논의와 주요 쟁점」, 『트레이드 브리프』, 한국무역협회, 2025.7.10.
- 채은선, 「EU AI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디지털 법제 Brief』,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7.15.
- 최은경, 「미, 전쟁 중에서 관세 전쟁... 한국 기계, 철강 과잉생산」, 『조선일보』, 2026.3.12.
- 최현웅, 「EU AI 법안의 도전과 기회: 2026년 8월 고위험 시스템 규제 본격화」, 『시사데이즈』, 2026.2.27.
- 이관재, 「EU의 CBAM 시행이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역협회, 2026.3.23.
- 한국경제인협회,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전기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2025.7.21.
- 한아름, 「EU 핵심원자재법(CRMA) 주요 내용과 영향」, 한국무역협회, 2023.4.19.
- 안상민, 「EU 핵심원자재법(CRMA)과 전략 프로젝트, 국내 공급망 출구 전략은」, 『배터리 투데이』, 2025.8.19.
- 황민서 외, 「중국 대외무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률신문, 2026.2.2.
- 허재철 외, 「미·중 전략경제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 안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
- Bown, Chad P., 「US-China Trade War Tariff」,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PIIE), 2023.
- EC, 「Announcement of Strategic Projects」, Feb. 2026.
- __, 「Guidelines on the FRS application」, 9 Jan 2026.

- __, 「Guidelines on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High-Risk AI Classification」, Feb. 2026.
- EU, Directive (EU) 2026/470 (Omnibus I), Feb. 2026. <<https://eur-lex.europa.eu/eli/dir/2026/470/oj>>
- Gantz, David & Tony Payan, 「Strategic Priorities for the 2026 USMCA Review」, Baker Institute, 2 Dec. 2025.
- IMF, 「Industrial Policies: Handle with Care」, Staff Discussion Note, 21 Mar. 2025b.
- ____, 「Industrial Policy since the Great Financial Crisis」, Oct. 2025a.
- ____, 「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y in Data」, Working Paper, Jan. 2024.
- ____, 「World Economic Outlook 2023」, Jul. 2023.
- KBA Europe, 「EU 역외보조금규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026.1.
- KOTRA 베이징무역관, 「중국, 15.5 계획 건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해외시장뉴스』, 2025.11.10.
- Martin, Fernando, 「Industrial Policy as Market-Shaping Competition: Evidence from China,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2009-2024)」, Global Trade Alert, Jan. 2026.
- _____, 「Security First: How Industrial Policy Changed in 2025」, Global Trade Alert, 18 Dec. 2025.
- McDermott Will & Emery, 「FSR Guidelines 2026: “Safe Harbors” for call ins」, 14 Jan 2026.
- OECD, 「An Industrial Policy Framework for OECD Countries: Old Debates, New Perspectives」, No. 127, May. 2022.
- _____, 「Key Issues in Digital Trade」, Oct. 2023.
- _____, 「Policy Responses to the Economic Crisis: Investing in Innovation for Long-Term Growth」, 2009.
- Reuters, 「Exclusive: Japan, US aim to add nuclear power project to \$550 billion investment package, sources say」, 4 Mar. 2026.
-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6」, 22 Sep. 2016.
- White & Cas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after Omnibus I Package」, 6 Mar 2026.
- _____, 「CRMA: Managing dependencies」, Feb. 2026.
- _____, 「The FRS Guidelines: What business needs to know」, Jan. 2026.
- White House, 「Adjusting Imports of Semiconductors」, 14 Jan. 2026.
- _____, 「Adjusting Imports of 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 14 Jan. 2026.
- World Bank, 「Sates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4」, 2024.
- _____, 「Top trends redefining global trade in 2026」, Global trade update, Jan. 2026.
- _____, 「Trade and development implications of key aspects of the energy transition」, 21. Feb. 2024.
- WTO,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25」, 2025a.
- _____, 「Trade Monitoring Update: Latest Trends」, 3 July, 2025b.

- _____, 「Large increase in new tariffs but also measures to ease global trade, WTO report shows」, 『Trade Monitoring』, 2 Dec. 2025c.
- _____, 「Report on G20 Trade Measures(mid-October 2024 to mid-October 2025)」, 13 Nov. 2025d.
- _____, 「World Trade Report 2023: Re-globalization for a Secure, Inclusive and Sustainable Future」, 2023.
- _____, 「Aid for Trade in a changing global context」, 2024.
- Xinhua, 「CPC plenum concludes, adopting recommendations for China's 15th Five-Year Plan」, 23 Oct. 2025.
- _____, 「Chinese lawmakers approve outline of 15th Five-Year Plan」, 12 Mar. 2026.



REPORT · LIST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402호	시각장애인&학생 · 교원의교과용&도서&접근권&보장을&위한&입법과제 「초 · 중등교육법」의 개정과 함께 정부의 교과서 공급체계 전면 개선 필요	2026.03.26.	김범주·백지연
제401호	기본부터 다시 갖춰야할 정보보호 체계 2025년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 분석 및 제도 개선과제	2026.03.26.	강은수·박소영
제400호	직업계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관련 입법 및 정책 과제 유학생 유치와 아동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 필요	2026.03.15.	조인식
제399호	그린란드 이슈와 미-유럽 관계 전망 미 거래주의 외교 정책으로 인한 국제질서 다극화와 시사점	2026.03.10.	심성은
제398호	미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제한법) 판결과 정책적 고려사항	2026.03.05.	정민정
제397호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피해자 중심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2026.03.04.	김혜미
제396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 징수 효율화 방안	2026.03.04.	류영아
제395호	소각시설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사회적 합의를 위한 '목적 정합형 연계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2026.02.19.	김경민
제394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관련 입법 논의 분석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2026.02.18.	이상은·정재하
제393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혐오집회' 규제, 어떻게 가능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안 검토	2026.02.12.	김범주·정재하
제392호	친생 추정에 막힌 381명의 '식별된 그림자 아동들' 출생통보제 시행 1년 6개월의 기록	2026.02.12.	허민숙
제391호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 운영과 쟁점 우리 국회는 미국 상원의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2026.02.11.	전진영
제390호	동물학대 재범차단을 위한 법적 방안 검토 보안처분으로서의 사육금지명령에 관하여	2026.02.09.	김광현·박찬미
제389호	지방행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주민소환제도 재설계	2026.01.27.	하혜영·김형진
제388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가짜뉴스 규제 체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명예훼손 법적 비교를 중심으로	2026.01.27.	최진응
제387호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 폐지와 유지의 갈림길에서	2026.01.26.	전진영
제386호	임박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교육감 선출은 어떻게? 통합 이후 교육 사무 분장의 고차방정식	2026.01.14.	김범주



산업통상 특집
소속기관 협동연구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산업-통상 넥서스 3대 축: 산업정책 안보화, 공급망 블록화, 시장접근 조건화

2026년 주목해야 할 미국·중국·EU 3대 경제권의 산업-통상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02-6788-4510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저자 | 최정윤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02-6788-4594 jychoi0719@assembly.go.kr



발간등록번호 31-9735049-001933-14
ISSN 2586-565X